KOSME
이슈포커스
2022-01호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2022. 2 |

KOSME 이슈포커스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연구실

Contents

요 약 1

01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 조사 개요 5

02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 조사 세부 내용 7

1.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준비수준 7
2.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과 현황 9
3.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12
4.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의향과 건의사항 14

03 정책적 시사점 17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구분	내 용
1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준비수준	· **中企 대부분(85.4%)은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 인식하나, 10곳 중 2곳만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며, 절반 이상은 계획 마련 단계** * 준비도 : 계획 마련 중(52.2%), 계획에 따라 진행 중(26.9%), 계획 마련 예정(11.3%), 준비계획 없음(9.6%) · **지역별·수출유무에 따라 준비수준은 상이함.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대비 사업 구조전환 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 응답 비율 : 수출(33.3%), 내수(26.0%)/ 수도권(30.1%), 비수도권(24.7%)
2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전략과 현황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해 **신사업 진출**과 **재직자 직무전환·역량강화** 추진 * 신사업 진출(48.3%), 재직자 직무전환·역량강화(22.3%), 신사업 인력채용(14.3%) 등 · **中企 10곳 중 7곳은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 * 독자적 결정(73.1%), 납품처 자문(18.9%), 컨설팅(8.0%) · **中企 57.1%가 사업전환 계획 단계였으며, 업종별로 대응편차가 있음** * 사업전환 계획(57.1%), 개발(27.3%), 출시(15.6%) * 신사업 제품 개발·출시 비중 : 섬유(60.0%), 화공(47.6%), 전기·전자(47.1%), 식품(38.5%), 금속(29.0%)
3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정책	· **구조전환 대응시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66.3%)이 가장 큰 애로사항** * 자금 부족(48.4%), 전문인력 부족(17.9%), 확신 부족(7.5%), 기술 부족(6.9%), 정보부족(6.6%) ·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정책자금(64.5%), 원스톱 지원(11.6%), 기술개발(6.6%), 진단·컨설팅(5.0%), 전문인력 양성(4.7%), 판로 개척(4.3%)** 순으로 응답 ·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인프라 보급**이, 구조전환으로 인한 **인력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직무전환 보조금과 신사업 인력양성**이 가장 필요 * 디지털전환 : 전문인력(38.5%), 디지털화 인프라 보급(34.6%), 디지털화 진단·컨설팅(16.6%) * 노동전환 : 직무전환 보조금(37.5%), 신기술 인력 양성(35.9%), 재직자 직무전환·전직지원 교육(20.3%)
4 정책적 시사점	· 中企 **대부분**은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나, **준비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전환 경로 설정 단계**부터 **체계적·종합적 준비 지원** 필요 · 전통제조업 등 **자발적 구조전환이 어려운 취약부문** 대상 **진단을 통한 선제적 구조전환 활성화** · **中企** 대부분(73.1%)는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구조전환방향과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도입·지원 필요 · **업종별 구조전환 시급성 정도**에 따라 **선제적 사업·직무전환** 및 **디지털·공정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 대응** 마련 등 **차별화된 지원책** 수립 ·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역의 신산업 육성** 등 **기업·노동·지역의 구조혁신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요 약]

Ⅰ.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과 준비수준

■ 응답 中企,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순으로 위기 대응 준비 중

- 응답 中企는 “신사업·유망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50.7%)”, “디지털전환(20.6%)”, “재직자 직무전환 등 노동전환(14.1%)” 순으로 위기 대응 준비 중
- 코로나 이후 中企의 위협요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45.3%)”,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감소(22.6%)”, “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선제적 사업전환 필요(13.2%)”, “공급망 리스크(10.6%)” 등으로 조사됨

■ 응답 中企의 10곳 중 8곳 이상은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나, 26.9%만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응답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에 대해 中企의 10곳 중 8곳(85.4%)이상이 “필요하다(매우 필요(44.9%) + 필요(40.3%))”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7.0%에 불과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 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2.2%)은 “계획 마련” 단계였으며, “2~3년 후 계획 마련 예정(11.3%)”, “관련 준비계획 없음(9.6%)” 순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 대비 사업 구조전환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 응답 : 수출(33.3%), 내수(26.0%)/ 수도권(30.1%), 비수도권(24.7%)

Ⅱ.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과 현황

■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으로 신사업 진출과 재직자 직무전환·역량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

- 대응 전략으로는 “신사업 진출(48.3%)”이 가장 높았으며, “재직자 직무전환·역량강화(22.3%)”, “신사업 분야 인력 채용(14.3%)”, “디지털 인프라 구축(10.5%)” 순으로 나타남

■ 中企의 대부분(73.1%)은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

- 中企의 73.1%가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요 납품처 자문(18.9%)”, “컨설팅(8.0%)” 순으로 나타남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현황 : 中企 57.1% 사업전환 계획 단계

- 응답 中企의 57.1%가 “사업전환 계획 단계”였으며, “신산업 제품 개발(27.3%)”, “출시(15.6%)” 단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사업 구조전환 대응 편차가 있음

Ⅲ.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정책

■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66.3%)

•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부족(48.4%)”과 “전문인력 부족(17.9%)”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7.5%)”, “기술 부족(6.9%)”, “정보부족(6.6%)”, “디지털 전환 인프라 부족(6.0%)” 순으로 나타남

■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정책자금 지원(64.5%)이 가장 필요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방안으로는 “정책자금(64.5%)”,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11.6%)”, “기술개발 R&D 지원(6.6%)”, “진단·컨설팅(5.0%)”, “전문인력 양성(4.7%)”, “판로개척 지원(4.3%)” 순으로 응답

■ 디지털 전환과 인력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인프라(73.1%)와 직무전환 보조금과 인력양성이 가장 필요

•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디지털 전문인력(38.5%)”, “인프라 보급(34.6%)”, “진단·컨설팅(16.6%)” 순으로 응답하여, 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을 위하여 진단·컨설팅을 바탕으로 인력 및 인프라 지원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 사업 구조전환으로 인한 인력문제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재직자 직무전환 보조금”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기술·신사업 분야 인력양성(35.9%)”, “재직자 직무전환·전직지원 교육(20.3%)” 순으로 나타남

Ⅳ.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의향 및 건의사항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정보 부족과 연계 우대혜택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애로사항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37.5%)”, “후속 지원사업 연계시 우대 혜택 부족(31.1%)”,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13.0%)” 순으로 응답

■ 응답 中企 10곳 중 7곳 구조혁신지원 신규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

• 中企의 71.1%가 구조혁신지원 신규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내수기업(71.0%)이 수출기업(75.0%)보다, 업력 7년 이상 기업이(80.0%) 창업기업(68.6%)보다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Ⅴ. 정책적 시사점

1 사업 구조전환 대응 및 준비수준

■ **응답 中企의 대부분은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었으나, 준비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구조전환 경로설정 단계부터 체계적 준비 지원 필요**

- 응답 中企의 10곳 중 8곳(85.4%)이 사업 구조전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계획에 따라 대응 중”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
- 업종별 사업 구조전환 필요시점, 방향성 등을 포함한 실행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구조전환 경로 설정 단계부터 체계적·종합적 준비 지원 필요

■ **지방·내수기업 등 구조전환 준비가 부족한 취약부분 대상 정책적 뒷받침 강화**

- 업종별로 사업 구조전환 준비수준은 상이하였으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대비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지역별, 수출유무 등에 따라 구조전환 준비도에 차이가 있어, 구조전환 준비도가 부족한 취약부분 대상 대응 지원 강화 필요

2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과 현황

■ **中企 대상 구조전환 계획·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업종별 시급성의 정도에 따라 선제적 사업전환과 공정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 대응 등 차별화된 지원 마련**

- 응답 10곳 중 7곳 이상(73.1%)은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 구조전환 방향 수립·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 급격한 사업축소로 신속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등)과 공정개선을 통한 저탄소·디지털화 대응이 필요한 산업군(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대상 맞춤형 대책 수립

3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과 필요지원 방안

■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애로사항으로 자금·전문인력 부족 등의 응답이 높아, 사업전환 기업 대상 원활한 자금공급과 인력 양성 지원 확대**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48.4%), 전문인력 부족(17.9%)의 응답이 높아 이러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지원정책 확대 필요

4 기업·노동·지역의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 등 기업·노동·지역의 전환을 일괄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화, 노동전환(직무전환·신사업 인력양성), 지역 주력산업 전환 등 다양한 정책 수요 반영 필요

01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코로나 시대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 구조변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업 구조전환 필요
-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구조전환 대응 준비수준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중진공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
조사기간	◆ 11월 11일(목) ~ 11월 23일(화)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선 및 SMS, E-mail 등 조사
표본크기	◆ 유효응답 기준 301개
표본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4.72%P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내용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과 준비수준	◆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 및 준비수준 ◆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 대응현황, 전담조직 등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애로사항과 정부지원 방안	◆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애로사항 ◆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中企 구조혁신지원센터 사업 참여의향 및 건의사항	◆ 中企 구조혁신지원센터 사업 참여의향, 컨설팅 수행기간 등 건의사항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애로사항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전 체		301	100.0%
지역	서 울	35	11.6
	인 천 / 경 기	88	29.2
	강 원	11	3.7
	대 전 / 충 청	40	13.3
	광주/전북/전남	35	11.6
	대 구 / 경 북	42	14.0
	부산/울산/경남	46	15.3
	제 주	4	1.3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매출액 (20년도)	5억 미만	31	10.3
	10억 미만	36	12.0
	50억 미만	109	36.2
	100억 미만	58	19.3
	300억 미만	52	17.3
	300억 이상	15	5.0
종업원 수	5인 미만	41	13.6
	10인 미만	60	19.9
	50인 미만	162	53.8
	100인 미만	28	9.3
	100인 이상	10	3.3
업종 대분류	금 속	49	16.3
	기 계	61	20.3
	섬 유	31	10.3
	식 료	26	8.6
	유 통	13	4.3
	전기/전자	22	7.3
	정보처리	24	8.0
	화 공	53	17.6
	기 타	22	7.3
업종 중분류	자 동 차	28	9.2
	기계/장비	26	8.5
	금속가공	34	11.1
	석유화학	5	1.6
	시 멘 트	1	0.3
	고무/플라스틱	11	3.6
	전자부품	11	3.6
	전기장비	6	2.0
	식 료 품	18	5.9
	섬유제품	12	3.9
	정보처리	16	5.2
	기 타	137	44.9
내수/수출	내수기업	262	87.0
	수출기업	39	13.0
창업기업 여부	창업기업	226	75.1
	창업기업 아님	75	24.9

02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 조사 세부 내용

1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과 준비수준

1 응답 中企,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순으로 위기 대응 준비 중

• 응답 中企는 신사업·유망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50.7%)”, “디지털전환(20.6%)”, “재직자 직무전환 등 노동전환(14.1%)” 순으로 코로나 이후 위기 대응 중임

위협에 대한 대응 준비 (n=301개사)

- 기타 의견으로는 스마트화 확대, 원자재 공급 다변화, 생산방식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거래처 다변화, 대체 품목 발굴 등이 있었음
- 업종별로 기계(65.6%), 금속(55.1%) 등이 사업전환 수요가 높은 편이었으며, 식품, 화공 업종은 디지털 전환 응답 비율이 각각 43.5%, 31.3%로 전체 평균(20.6%) 대비 크게 높아 해당 업종이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보처리 업종은 재직자 직무전환 등 노동전환 응답비율이 25.0%로 전체 평균(14.1%) 대비 높아 노동전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이후 위협요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감소, 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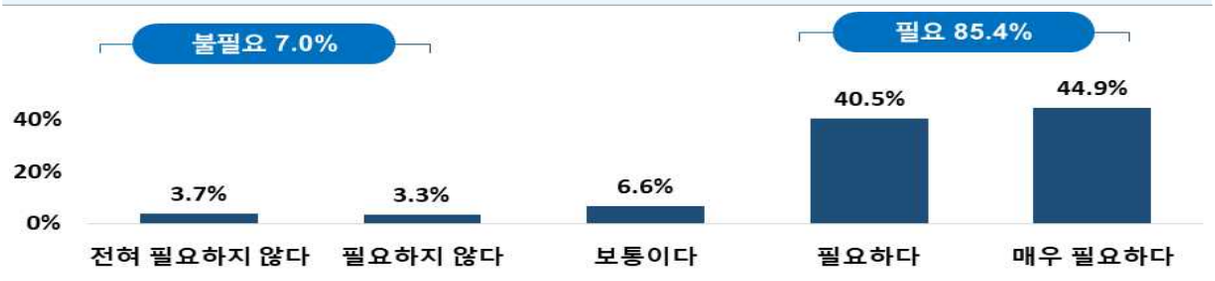
• 매출감소, 수익성 저하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책자금을 통한 유동성 확보 지원과 중·단기적으로 사업 구조전환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필요

2 사업 구조전환 대응 인식 : 中企 85.4% 사업 구조전환 필요 인식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에 대해 中企의 10곳 중 8곳(85.4%) 이상이 “필요하다(매우 필요(44.9%) + 필요(40.3%))”고 응답하였으며,

•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3.7%) + 필요하지 않다(3.3%))”는 응답 비율은 7.0%로 나타나 응답 中企 대부분은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 구조전환 대응 준비 필요성 (n=301개사)



- 업종별로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 응답 비율은 섬유(100.0%), 기계(91.8%), 식품(90.9%), 정보처리(87.5%), 유통(83.0%), 금속(81.6%), 전기·전자(80.8%), 화공(80.6%) 순으로 나타났으며,

- 섬유, 기계, 식품, 정보처리 업종의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금속, 화공 업종은 낮은 편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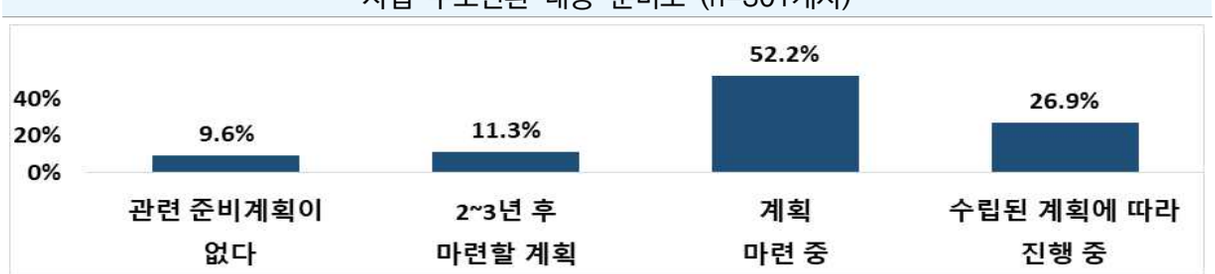
- 기업 규모별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 응답 비율은 “5인 미만(82.9%)”, “10인 미만(85.0%)”, “50인 미만(86.4%)”, “100인 미만(89.3%)”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中企가 대응 준비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조전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中企는 사업 구조전환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8.0%인 반면,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中企는 4.8%에 불과

3 사업 구조전환 준비도 : 中企 26.9%,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해 中企의 절반 이상(52.2%)은 “계획 마련” 단계였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26.9%)” “2~3년 후 계획 마련 예정(11.3%)”, “관련 준비계획 없음(9.6%)” 순으로 나타남

사업 구조전환 대응 준비도 (n=301개사)



- 사업 구조전환 대응 준비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기존 제품으로 충분”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금부족(31.0%), 정보부족(10.3%), 기타(6.9%), 인력부족(3.4%) 및 신규진출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3.4%) 순으로 나타남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 인식이 높은 업종이 구조전환 준비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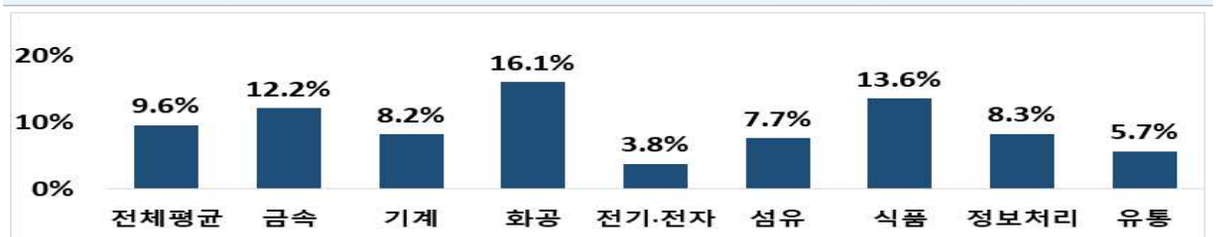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 인식이 높았던 섬유, 기계, 정보처리 업종은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7.7%, 8.2%, 8.3%로 전체 평균(9.6%) 대비 낮아 준비수준도 상대적으로 양호함. 식품 업종은 필요성 인식은 높았으나, 준비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 응답 비중 : 섬유(100.0%), 기계(91.8%), 식품(90.9%), 정보처리(87.5%), 유통(83.0%) / 전체 평균 (85.4%)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성 인식이 낮았던 금속, 화공 업종의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12.2%, 16.1%로 전체 평균 9.6% 대비 높아 사업 구조전환에 대한 준비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전기·전자 업종은 필요성 인식은 낮았으나, 준비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함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필요” 응답 비중 : 금속(81.6%), 전기·전자(80.8%), 화공(80.6%), / 전체 평균 (85.4%)

업종별 사업 구조전환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 응답 비중(n=301개사)



• (내수/수출) 수출기업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 응답비율은 33.3%로 내수기업 26.0% 대비 높게 나타나 사업 구조전환에 대한 준비수준이 내수기업 대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공급망 참여 비중이 높고, 납품처로부터 미래차 등 탄소중립·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37.1%가 응답하여 전국 평균(26.9%) 대비 사업 구조전환에 대한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 응답 비중 : 수도권 (30.1%), 비수도권(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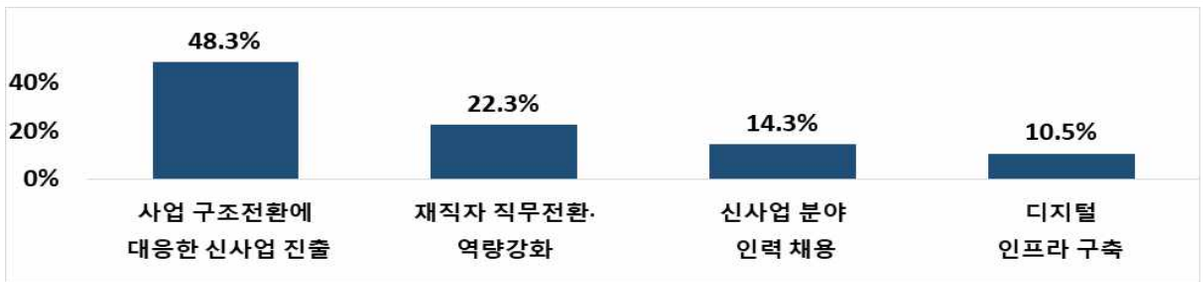
2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과 현황 ►►

1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 : 中企 48.3%, 신사업 진출

•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으로는 “신사업 진출”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재직자 직무전환·역량강화(22.3%)”, “신사업 분야 인력 채용(14.3%)”, “디지털 인프라 구축(10.5%)” 순으로 나타남

-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분야 인력 채용 등의 인력지원도 중소기업에게 필요함을 보여줌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 (n=23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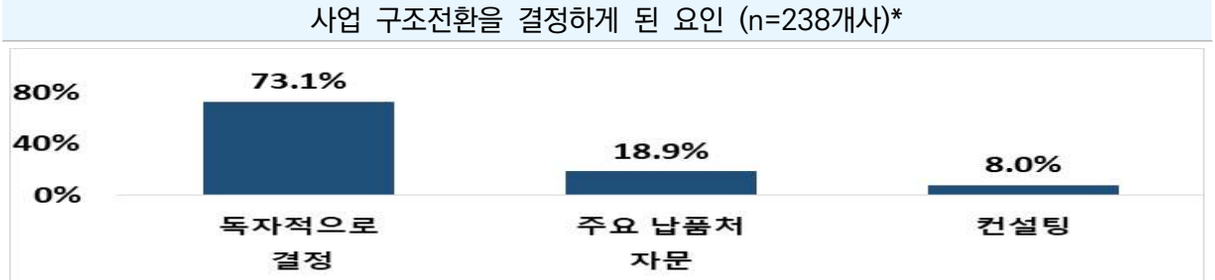
* 사업 구조전환 대응 계획 마련 중이거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238개사

- 식품 업종은 사업 구조전환 대응전략으로 "재직자 직무전환·역량강화(33.3%)"를 "신사업 진출(33.3%)"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 정보처리는 "신사업 진출(47.6%)"과 함께 "신사업 분야 인력채용(33.3%)"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전문인력이 중요한 산업 특성을 반영함

2 사업 구조전환 결정 요인 : 中企 73.1%, 사업 구조전환 독자적 결정

- 응답 中企의 73.1%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주요 납품처 자문(18.9%)", "컨설팅(8.0%)" 순으로 나타남

사업 구조전환을 결정하게 된 요인 (n=23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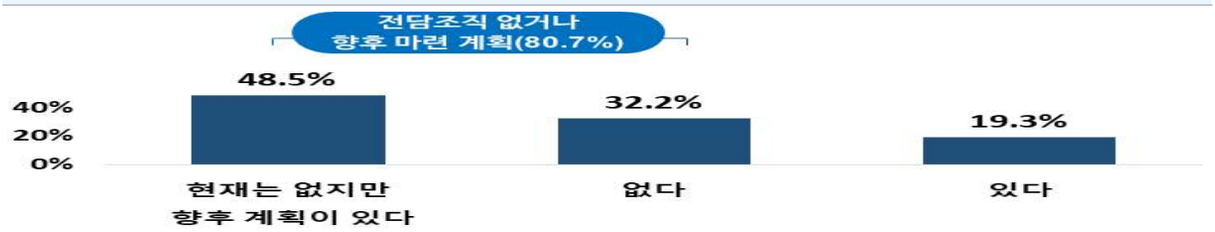
* 사업 구조전환 대응 계획 마련 중이거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238개사

- 섬유, 식품 업종의 "납품처 자문" 응답 비중은 각각 36.4%, 33.3%로 전체 대비 2배 이상 높아 사업 구조전환을 납품처 자문에 따라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 화공의 경우 컨설팅 응답 비중(20.0%)이 평균(8.0%) 대비 2배 이상 높아, 컨설팅에 따라 사업 구조전환을 결정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3 사업구조전환 대응 전담조직 : 中企 80.7%, 전담조직 없거나, 향후 구축 계획 있음

- 응답 中企의 80.7%는 사업 구조전환 대응 준비 전담조직이 없거나 향후 구축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담조직이 있는 中企 비율은 19.3%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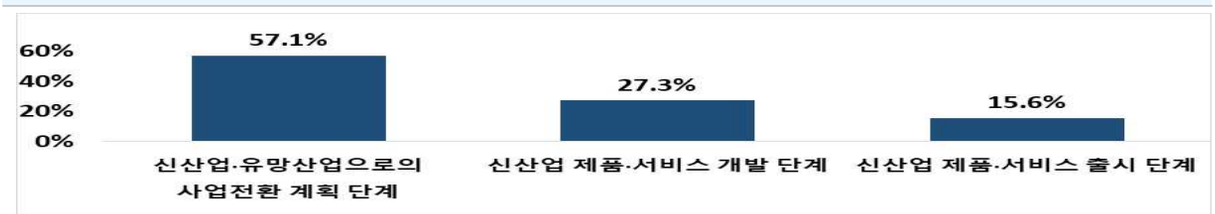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담조직 여부 (n=301개사)



4 사업 구조전환 대응 현황 : 中企 57.1% 사업전환 계획 단계

• 사업 구조전환 대응 현황으로는 응답 中企의 57.1%는 “신사업·유망산업으로의 사업전환 계획단계”였으며, “신사업 제품·서비스 개발단계(27.3%)”, “신사업 제품·서비스 출시단계(15.6%)” 순으로 나타남

사업 구조전환 대응현황 (n=205개사)*



* 사업 구조전환 대응현황으로 계획 단계, 개발 단계, 제품·서비스 출시 단계로 응답한 205개사

• 업종별로, 섬유, 화공, 전기·전자 업종은 “신산업 제품·서비스 개발 및 출시 단계” 응답 비율은 각각 60.0%, 47.6%, 47.1%로 전체 평균(42.9%) 대비 높았으나, 금속과 식품 업종은 29.0%, 38.5%로 불과하여 업종별로 대응 편차가 있음

- “사업 구조전환 준비계획 없음” 응답 비율이 낮아 준비수준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섬유, 전기·전자 업종이 신산업 제품·서비스 개발·출시단계 응답 비율도 높음
- 화공은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16.1%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음과 동시에 제품·서비스 출시단계에 업체의 비율도(28.6%)로 가장 높아, 업종 내 사업 구조전환 대응수준 편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 구조전환 준비계획 없음” 응답 비중 : 화공(16.1%), 식품(13.6%), 금속(12.2%), 정보처리(8.3%), 기계(8.2%), 섬유(7.7%), 전기·전자(3.8%)/ 전체 평균 (9.6%)

• 업력별로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신제품 개발·출시 단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업력 7년 이상 기업(34.4%) 대비 높은 편으로 창업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구조전환 대응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창업기업은 유연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 대비 제품 개발 주기가 짧아, 신산업 진출시 제품 개발·출시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여짐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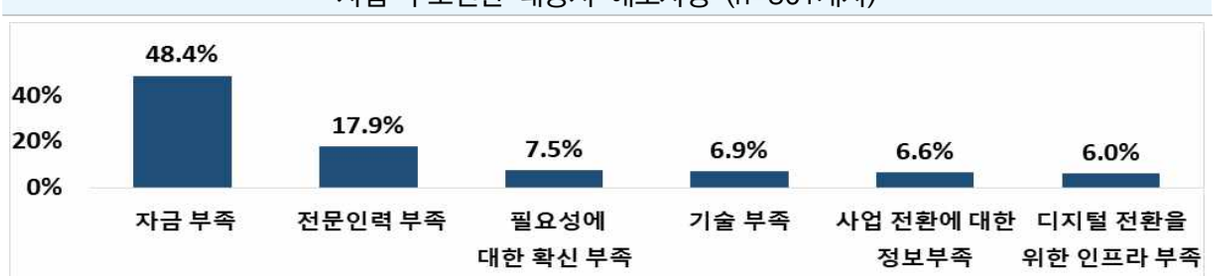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사업전환 계획 단계	개발·출시 (A+B)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A)	제품·서비스 출시 단계(B)
전체		205	57.1	42.9	27.3	15.6
업종	금속	31	71.0	29.0	16.1	12.9
	기계	42	57.1	42.9	33.3	9.5
	화공	21	52.4	47.6	19.0	28.6
	전기·전자	17	52.9	47.1	35.3	11.8
	섬유	10	40.0	60.0	50.0	10.0
	식품	13	61.5	38.5	15.4	23.1
	정보처리	18	55.6	44.4	22.2	22.2
	유통	37	59.5	40.5	21.6	18.9
	기타 제조	9	33.3	66.7	55.6	11.1
	기타 서비스	7	57.1	42.9	42.9	0.0
창업기업 여부	창업기업	144	53.5	46.5	29.2	17.4
	업력 7년 이상	61	65.6	34.4	23.0	11.5

3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 ►►

1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애로사항 : 자금부족(48.4%), 인력부족(17.9%)

•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부족”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인력 부족(17.9%)”,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7.5%)”, “기술 부족(6.9%)”, “정보부족(6.6%)”, “디지털 전환 인프라 부족(6.0%)” 순으로 나타남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애로사항 (n=30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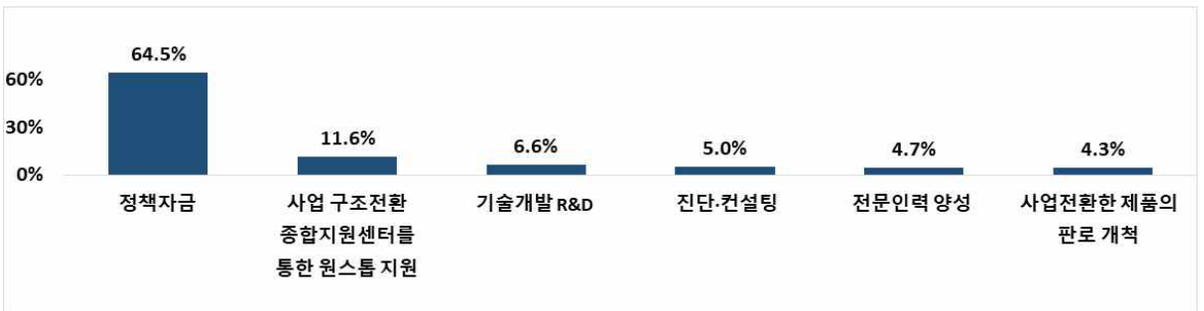
• 화공 업종은 “기술 부족” 응답 비중이 15.2%로 전체 평균(6.9%) 대비 2배 이상 높아, 해당 업종의 기술 애로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기·전자 업종은 자금 부족과 함께 “확신 부족(16.1%)”을, 섬유 업종은 “정보부족(14.3%)”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택하여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2 필요 지원 정책 : 정책자금(64.5%), 원스톱 지원(11.6%)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정책자금(64.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구조전환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11.6%)”, “기술개발 R&D 지원(6.6%)”, “진단·컨설팅(5.0%)”, “전문인력 양성(4.7%)”, “판로 개척 지원(4.3%)” 순으로 나타남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n=301개사)



- 전기·전자 업종은 기술개발 지원 응답비율(11.5%)이 전체 평균 대비(6.6%) 크게 높아 해당 업종이 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구조전환 종합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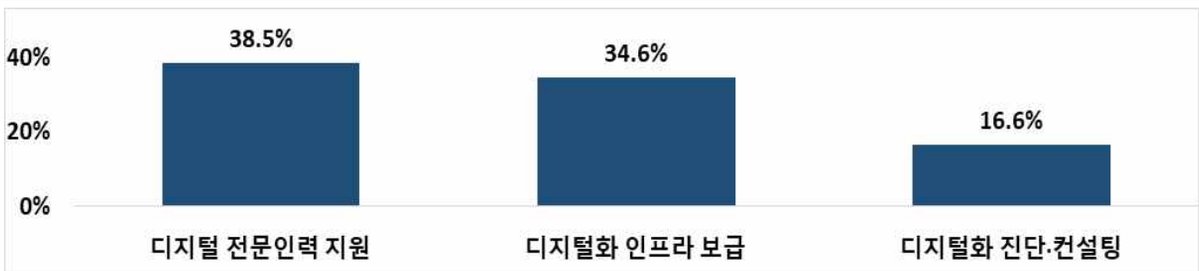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정책 자금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기술개발 R&D	진단·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기타
전체	301	64.5	11.6	6.6	5.0	4.7	4.3	3.3
5인 미만	41	78.0	4.9	4.9	4.9	2.4	4.9	0.0
10인 미만	60	61.7	11.7	8.3	3.3	5.0	6.7	3.3
50인 미만	162	64.8	11.7	5.6	6.2	4.3	3.7	3.7
100인 미만	28	53.6	17.9	14.3	0.0	7.1	3.6	3.6
100인 이상	10	50.0	20.0	0.0	10.0	10.0	0.0	10.0

3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 전문인력 지원(38.5%)

-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방향으로는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38.5%)”이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화 인프라 보급(34.6%)”, “디지털화 진단·컨설팅(16.6%)” 순으로 응답함
- 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을 위해서는 진단·컨설팅을 바탕으로 인력 및 인프라 지원연계가 필수적임을 반영함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n=301개사)



4 구조전환으로 인한 인력문제 대응 : 재직자 직무전환 보조금 가장 필요(37.5%)

- 사업 구조전환으로 인한 인력문제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재직자 직무전환 보조금(직무전환 실비, 교육시설 임차비, 기숙사비 등 지원)”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기술·신사업 분야 인력 양성(35.9%)”, “재직자 직무전환·전직지원 교육(20.3%)” 순으로 나타남
- 금속, 기계, 정보처리 업종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양성(44.9%, 42.6%, 37.5%)”이 가장 필요하다고 직무전환을 위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사업 분야 인력양성 지원에 대한 현장 수요도 높은 것으로 보여짐

사업 구조전환으로 인한 인력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n=301개사)

4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의향 및 건의사항

1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애로사항 : 정보 부족(37.5%), 연계 우대혜택 부족(31.1%)

-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애로사항으로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후속 지원사업 연계시 우대 혜택 부족(31.1%)”, “기타(18.4%)”, “신청서 작성 어려움(13.0%)” 순으로 나타남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애로사항 (n=301개사)

2 구조혁신지원 신규사업 참여의사 : 中企 71.1% 활용의사 있음

- 中企의 71.1%가 구조혁신지원 신규사업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업종) "구조혁신지원 신규사업 참여의사가 있다"라는 응답비율은 식품(77.3%), 섬유(76.9%), 기계(75.4%), 정보처리(75.0%), 전기·전자(73.1%) 순으로 나타남
- (수출여부/업력) 내수기업(71.0%)보다 수출기업(74.4%)의 참여의사가 높았으며, 업력 7년 이상(80.0%)의 참여의사가 창업기업(68.6%)보다 높았음

3 신규사업 미 참여 사유 : 中企 66.3% 장기간 진행되는 컨설팅 부담

- 구조혁신지원 신규사업 미 참여 이유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컨설팅에 대한 부담"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컨설팅사의 능력 부족(22.1%)", "컨설팅 진행시 기업 자부담(10~30%) 비용 부담(11.6%)"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장기간 진행되는 컨설팅에 대한 부담" 응답 비율은 "5인 미만(81.8%)", "10인 미만(68.8%)", "50인 미만(66.7%)", "100인 미만(55.6%)"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장기간 진행되는 컨설팅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컨설팅의 능력부족" 응답 비율은 "5인 미만(9.1%)", "10인 미만(25.0%)", "50인 미만(16.7%)", "100인 미만(44.4%)"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컨설팅사의 능력 부족 때문에 구조혁신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4 컨설팅 희망 소요기간 : 中企 30일 이내와 10일 이내 가장 선호

- 사업전환/디지털전환/노동전환 분야별 컨설팅의 수행기간으로는 30일 이내(33.5%)와 10일 이내(27.0%)를 가장 선호하였고, 업종별로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음

컨설팅 희망 소요기간 (n=215개사)*

* 구조혁신지원 신규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215개사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식품은 10일 이내의 단기 컨설팅을 선호하여 30일 이내 장기 컨설팅을 선호하는 타업종과 차이를 보임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5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45일 이내
전체		215	14.0	27.0	10.2	33.5	15.3
업종	금속	32	12.5	25.0	3.1	46.9	12.5
	기계	46	15.2	23.9	17.4	32.6	10.9
	화공	20	10.0	20.0	10.0	35.0	25.0
	전기·전자	19	10.5	42.1	10.5	26.3	10.5
	섬유	10	10.0	30.0	0.0	40.0	20.0
	식품	17	17.6	35.3	11.8	17.6	17.6
	정보처리	18	0.0	27.8	16.7	38.9	16.7
	유통	37	21.6	21.6	10.8	29.7	16.2
	기타제조	8	0.0	37.5	0.0	25.0	37.5
	기타서비스	8	37.5	25.0	0.0	37.5	0.0

5 기타 의견

구 분	주요내용
자금	◆ 사업 구조전환시 시설 소요가 증가되므로 시설자금 대출 필요 ◆ 사업 구조전환에 필요한 중장기 자금 지원 필요 ◆ 정책자금 상환 및 거치기간 연장 필요
컨설팅	◆ 사업구조전환을 위한 계획부터, 컨설팅, 정책자금 적기 지원 필요 ◆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필요 ◆ 컨설턴트 역량 강화(해당분야 대기업 실무 담당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 자율컨설팅 제도(업체 희망분야만 선택적으로 컨설팅 진행 가능) 도입 필요 ◆ 사업 구조전환 방향성 제시 컨설팅 필요
인력지원	◆ 사업구조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 부족 ◆ 인력 장기근속 지원 필요
정보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신규사업에 대한 전환 필요성 느끼지만 정보 부족으로 대응 애로
지원요건 및 대상	◆ 사업전환기업의 사업전환일로부터 창업으로 인정 ◆ 지방 중소기업, 창업 7년 이상 기업 대상 지원 확대 ◆ 풍력, 태양력 뿐만 아니라, 자원 재순환 리사이클 기업 대상 우대 지원 확대
기타	◆ 원스톱 시장 개척 지원 ◆ 수출 희망국가의 신뢰도 높은 바이어 추천 필요 등

03 정책적 시사점

1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위협 요소와 대응방안

○ 코로나 이후 中企는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감소, 산업 구조전환에 따른 사업전환 등과 같은 위협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위한 금융지원과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신사업 진출 지원 필요

- 코로나 이후 中企의 위협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45.3%),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감소(22.6%), 산업 구조전환에 따른 사업전환(13.2%), 공급망 리스크(10.6%) 등 다양하여 위협요인별 맞춤형 지원 필요
-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지원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저탄소·디지털화 등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업 다변화,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

2 사업 구조전환 대응 및 준비수준

○ 응답 中企의 대부분은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준비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구조전환 경로설정 단계부터 체계적 준비 지원 필요

- 응답 中企의 10곳 중 8곳(85.4%)이 사업 구조전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계획에 따라 대응 중”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하여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과잉공급 및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 구조전환 대응 시급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52.2%)은 계획 마련 중인 단계로 사업 구조전환 준비수준은 부족한 상태임

* 사업 구조전환이 시급한 자동차 업종 또한 10곳 중 1곳만(10.7%) “수립된 계획에 따라 대응 중” 이며, 67.9%는 계획 마련 단계로 조사됨

• 업종별 사업 구조전환 필요시점, 방향성, 기존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진출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포함한 실행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구조전환 경로 설정 단계부터 체계적·종합적 준비 지원 필요

○ 업종별·지역별·수출유무 등에 따라 사업 구조전환에 대한 준비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내수기업 및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대상 정책적 뒷받침 강화 필요

• 업종별로 사업 구조전환 준비수준은 상이하였으며, 전기·전자, 섬유, 기계 업종은 "관련 준비계획 없음(3.8%, 7.7%, 8.2%)"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9.6%) 대비 낮아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 화공(16.1%), 금속(12.2%) 업종은 "준비계획 없음" 응답 비율이 높아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또한 수출기업(33.3%)이 내수기업(26.0%) 대비, 지역별로 수도권 기업(30.1%)이 비수도권(24.7%) 대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사업 구조전환에 대한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지역별, 수출유무 등에 따라 구조전환 준비도에 차이가 있어 내수기업, 지역기업, 전통제조업 등 사업 구조전환 준비도가 부족한 취약부문 대상 대응 지원 강화 필요

3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과 현황

○ 업종별 구조전환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 선제적 사업전환과 직무전환의 신속한 지원 및 디지털화·공정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등 차별화된 지원책 수립

• 급격한 사업축소·전환이 예상되어 신속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과, 단기적 사업 축소보다는 저탄소·디지털화 공정전환이 필요한 산업군(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대상 맞춤형 대책 수립

분야	구조전환 시급성	지원내용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 사업축소·전환 예상 • 단기적 노동전환 예상	• 선제적 사업 축소, 신사업 전환 지원 • 노동자의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강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 단기적 사업 축소 제한적 • 중·장기적 노동전환 예상	•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저탄소·디지털화 지원 (탄소중립 수준 진단, 탄소중립 혁신 바우처 등) • 근로자 디지털 역량 제고

* 자료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21) 업종별 구분 참고

** 자동차 부품기업의 81.6%는 미래차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구조전환 대응현황은 저조한 편임
자료 : '20년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자동차연구원, 2020)

- (사업전환) 사업전환자금, 구조혁신 컨설팅, 기술개발, 판로 등 지원
- (저탄소·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통한 Net-Zero, 제조스마트화 자금, 탄소중립 경영혁신바우처 지원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데이터 수집 인프라, 데이터 가치 평가

- (노동전환) 참여기업의 노동전환 시급성 정도에 따라 ①직무전환·전직 ②재직자 역량강화 ③전문인력 양성·매칭 등 인력지원사업 연계지원

○ 中企 중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중소기업 대상 구조전환 계획과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과정의 일괄지원 체계 필요

- 응답 10곳 중 7곳 이상(73.1%)은 사업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 구조전환 방향 수립·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또한, 사업 구조전환 대응 전략으로는 신사업 진출(48.3%)이 가장 높았고, 재직자 직무전환·역량강화(22.3%), 신사업 분야 인력 채용(14.3%), 디지털 인프라 구축(10.5%) 등을 응답하여,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디지털·노동전환 과정에서 수요발굴,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일괄지원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구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사업·디지털·노동 전환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자금, 컨설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맞춤형 연계 지원
  - 전담 정책매니저를 지정 후 기업의 구조혁신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성공적인 구조전환과 신사업 진출 성공률 제고

[표 1. 사업 구조전환 통합 지원체계(안)]

	사업·디지털·노동전환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연계지원
사업 전환	· **인프라**(추진의지, 네트워킹) · **준비도**(인식도, 인력, 시설) · **가능성**(업종 관련성·적합성)	· 신사업 비즈니스 계획 수립 · 기술·인력·채널 확보 방안 · 소요자금, 조달방안 등	· (자금) 사업전환지원자금 · (기술) R&D, 스마트공장 등 · (수출) 수출바우처
디지털 전환	· **인프라**(전문성, 네트워킹) · **필요성**(디지털전환 수용 등) · **가능성**(디지털전환 성숙도 등)	· 디지털 혁신 역량진단 · 디지털 전환 과제 도출 ·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보조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 (기술) ICT 혁신기술개발 · (인프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노동 전환	· **인프라**(전환인식, 대응역량) · **필요성**(시급성, 사업 불확실성) · **가능성**(역량관리, 인적계획)	· 노동전환 인식수준 조사 · 노사관계 수준 진단 · 노사관계 지원 교육	· (보조금) 노동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인력) 직무전환, 신사업 교육

* 자료 : 사업·노동·디지털전환 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고서 연구용역(중진공, 한국생산성본부, 2021)

○ 사업 전환 추진시 창업 수준의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활성화 필요

• 사업 구조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시 창업 수준의 설비투자, R&D 등이 요구되므로 사업 전환 기업 대상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사업의 인센티브 방안 적극 도입하여 사업 구조전환 활성화 필요

- 사업전환 추진 기업 대상 사업 전환일로부터 신규 창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으며 창업기업 수준의 적극적인 정책자금 지원, 투자,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 확대 필요

* 현행 사업전환 제도 인센티브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우대, 주식교환, 합병·분할, 영업 양수 등에 대한 상법상 절차 간소화 등

4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과 필요 지원 방안

○ 사업 구조전환 대응시 애로사항으로 자금·전문인력 부족 등의 응답이 높아, 사업전환 기업 대상 원활한 자금공급과 인력 양성 지원 확대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48.4%), 전문인력 부족(17.9%)의 응답이 높아 이러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지원정책 확대 필요

- (정책자금) 사업 구조전환시 신규 시설투자,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및 스케일업 금융 확대 지원 필요
- (직무전환·인력양성) 저탄소·디지털화 등 직무전환 수요조사를 통해 신사업 분야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항공, 조선 등) 직무전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

• 또한, 사업 구조전환 필요성에 대한 확신(7.5%)과 정보가 부족(6.6%)하다는 응답도 있어, 자발적 구조전환이 어려운 전통 제조업과 성장 정체 중소기업 대상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전환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 필요

○ 업종·기업규모별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달라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세심한 정책 지원 필요

• 사업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방향으로는 정책자금(64.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 업종별로 전기·전자 업종은 기술개발 정책수요가 전체 대비 약 2배 이상 높았으며, 기업규모별로 규모가 작을수록 정책자금을, 규모가 클수록 구조전환 종합센터를 통합 원스톱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사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화·노동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인프라 지원(73.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디지털화 진단·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물리적 인프라 연계지원 필요

• 인력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직무전환 보조금(37.5%)과 함께, 인력 양성(35.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신사업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

5 기업·노동·지역의 구조전환 대응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 등 기업·노동·지역의 전환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화, 노동전환(직무전환·신사업 인력양성), 지역 주력산업 전환 등 다양한 정책 수요 반영 필요

- (사업전환) 정책자금, 구조전환 종합지원센터 지원, 기술개발, 진단·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디지털화) 디지털화 진단·컨설팅,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 (노동전환) 노동전환 진단·컨설팅, 탄소중립, 미래차 등 신사업 분야 인력양성, 직무전환 교육과정 및 보조금
- (지역혁신) 지역 주력산업의 축소·폐쇄에 따른 미래차,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혁신 프로젝트 발굴·수행

* (예시) 경남지역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 플랫폼 구축

* (예시) 철강, 화학, 플라스틱, 고무 등 탄소 多배출 산업단지 제조현장의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등을 연계지원하여 그린혁신 단지로 전환 지원

• 사업전환과 함께 디지털·저탄소화, 노동전환, 지역혁신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6 정책수요자 중심의 구조혁신지원사업 추진 필요

○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 응답 中企의 10곳 중 7곳 이상은 구조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참여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은 장기간 진행되는 컨설팅(66.3%)을 가장 큰 부담요소로 꼽아,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에 맞는 컨설팅 기간(30일 이내 장기 또는 10일 이내 단기) 설계, 자율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세부 지원정책 수립 필요

  * 업체가 희망분야만 선택적으로 컨설팅 가능

- 또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보 부족, 후속 연계지원 사업 우대 혜택 부족 등의 응답이 높아, 구조혁신 지원사업 신규 추진시 활발한 사업홍보가 필요하며 후속 사업을 연계지원하여 정책효과 제고 필요

KOSME 이슈포커스

참고 문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생산성본부. (2021). 사업·노동·디지털전환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용역.
- 관계부처 합동. (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1.7.22.).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1.7.23.).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 한국자동차연구원. (2021.7.2.).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대응방안.

KOSME

발 행 인 김학도
편 집 인 정책연구실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27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